

〈제 531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은행

◆ ‘광주상생카드’ 사주기 운동에 적극 참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21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시된 ‘광주상생카드’ 사주기 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광주상생카드’는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2종류로, 체크카드는 연회비 없이 광주은행 영업점 및 광주은행 인터넷, 모바일 웹을 통해 발급 신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소재 가맹점에서는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지역자본 역외 유출방지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가맹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선불카드는 광주은행 영업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광주광역시 예산 소진시까지 개인에 한해 월 50만원까지 5%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모아종합건설

◆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모아종합건설(회장 박치영)은 지난 15일 보성 다비치 콘도에서 박치영 회장, 박윤하 부회장, 계열사 사장단, 임직원 및 협력업체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MOVE - MOTIVATE 더 큰 미래를 위해 다시 혁신하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으로 제2의 도약을 다짐했다. 또한 협력업체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21개사에 표창패와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10년 이상 장기근속직원 등 임직원 34명에 대한 포상도 진행했다.

II. 광주경충 소식

〈2019년 임·단협 체결 대응전략 설명회 개최〉

본회(회장 최상준)는 지난 19일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2019년 임·단협 체결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28개사 40명의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부 정책방향 ▶노동계의 임금·단체교섭 추진방향 ▶2019년 임금관련 주요 이슈 진단 및 대응방안 ▶2019년 단체교섭 환경 및 전망 등 합리적인 임금·단체협약이 되기 위한 대응전략에 관한 주제로 진행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열악한 상황과 노조의 경영참여 등 노동계의 다양한 요구로 인해 노사관계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설명회를 통해 기업에서는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기업형 5기 참여기업 간담회 실시〉

본회(회장 최상준)는 지난 21일 광주청년일경험드림(Dream)사업 5기 참여기업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65개사 80명의 참여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년일경험드림 사업 취지와 근로계약 체결 및 일경험드림 근무 시 빈번히 문제가 발생하는 근로시간 및 임금 등에 대한 중점적인 노무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수행기관과 참여기업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추후 일정 및 제출서식 안내와 함께 5기 일경험드림 종료 시까지 많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II. 광주경충 소식

<1434회 금요조찬포럼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는 3월22일 오전 7시 신양파크호텔에서 박병규 광주시 사회연대일자리 특보를 초청 <광주형 일자리 추진경과 및 시사점>이란 주제로 제1434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적정임금, 적정 노동시간,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자는 핵심과제를 가지고 사회적 대타협과 일자리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공동체 모델이다.

완성차 공장은 빗그린산단의 123만평에 민간기업과 공동출자로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투자규모 7,000억원으로 광주시가 21%, 현대차가 19%, 지역기업, 재무적 투자자 등이 60%로 구성된다.

생산차종은 경SUV 신규차종으로 21년 차량을 양산하고 생산규모는 10만대 생산 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며, 직접고용 인원 1,000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 지지로 만들어낸 첫 번째 성공적 사례이며, 이를 통해 유사한 모델이 타 지자체에서도 적극 추진될 것이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현재의 자동차산업의 불투명한 미래와 구조적 불평등을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해외 투자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 노사 동향

■ 고용부는 국회 환노위 업무보고 실시(3. 15)

- 정부가 고용노동정책 기조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설정한 가운데 고용부는 중점과제로 일자리 기회 확대, 일자리 질 향상,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을 제시

[참고 1] 고용부 환노위 업무보고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일자리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사업 효율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지원 확대, 성과평가에 따른 효율화 추진 ▲ 지역·산업 중심 일자리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업·자동차업종 고용상황 대응 체계 마련 ▲ 대상별(청년·여성·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일자리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내 괴롭힘·임금체불·채용비리 근절 ▲ 정규직 고용관행 확산 ▲ 산업재해 예방 및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안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마련
사회적 대화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층적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미래 환경 변화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형태종사자,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실업급여 보장 수준 향상

■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 후속대책 마련에 주력

- 고용부는 2. 27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고, 당·정협의 등을 통한 입법화에 집중
- 탄력근로제 관련 노사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고용부는 합의 내용의 홍보와 현장안착을 위한 지도 점검 강화 예정(3. 13 2018년도 근로 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근로제 개편 내용 브리핑)
 -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정착을 위해 미조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 여부,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 점검 방침

Ⅲ. 노사 및 판례동향

[참고 2] 고용부 탄력근로제 개편 설명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미조직사업장 근로자대표 동의	▲ 사용자 임의 선출 근로자대표는 자격 없음. ▲ 미조직 사업장 중심 근로자대표 자격 조사 추진
사용자 임금보전 방안 신고의무	▲ 고용부 장관이 서면합의를 통해 마련된 임금보전 방안을 확인한 경우 신고의무 면제 ▲ 서면합의 내용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 서면합의상 임금보전 방안이 미흡할 경우 재합의를 하거나 사용자가 방안을 마련해 신고
11시간 연속휴식제 예외 조항	▲ 유럽연합(EU), 독일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불가피한 경우’ 구체화 ※ EU 예외 사유 : 사고 발생 시 또는 긴박한 사고의 위험시, 소방 및 방재 서비스 등 ※ 독일 예외 사유 : 긴박한 상황, 원료 또는 생필품의 부패 또는 작업결과와 실패가 우려되는 경우에 일시적 업무 등

○ 한편, 고용부는 5월부터 주52시간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근로 감독에 나선다는 방침

- 5. 1 ~ 6. 15까지 사업장 3,000여곳을 점검하고 이중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곳을 선정해 8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

■ 3월 임시국회는 3.7 ~ 4.5까지 진행

○ 여야는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마쳤고, 향후 대정부질문, 상임위별 업무 보고 및 법안 심사 예정

[참고 3] 한국노총 2019년 단체교섭 주요 요구

일 정	주 요 내 용
3. 7(목)	▲ 3월 임시국회 개회식, 외통위·예결위원장 선거
3. 11(월) ~ 3.13(수)	▲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3. 19(화) ~ 3.22(금)	▲ 대정부질문(정치, 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3. 28(목) / 4. 5(금)	▲ 안건처리 본회의 ※ 국회의원 보궐선거 : 4. 3(수)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양교섭단체 3당은 대표연설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공정거래법 등 경제정책, 노동정책 등에 대한 방향 설명
- 더불어민주당은 포용성장 정책, 공정거래법 추진, 대기업노조 임금자제 등의 필요성 강조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판,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저임금제도 개선 필요 주장

[참고 4] 3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요 내용

구분	경제 분야	노동 분야
더불어 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극화 해소 위한 포용성장 ▲ 광주형 일자리 확산 등 혁신성장, 공정거래법 추진 등 공정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덴마크 방식 사회적 대타협 (실업급여 확대 및 노동유연성 강화), 대기업노조 임금자제, 임금체계 단순화
자유 한국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주도성장은 위험적 경제정책 ▲ 상법, 공정거래법, 스톱어드십 코드 도입은 기업 족쇄 채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임시국회에서 탄력적 근로 시간제 기간 확대, 주휴수당 조정,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다룰 계획
바른 미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활력제고 위한 경제정책, 규제 혁신, 규제법안 경제영향의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도입요건 완화 ▲ 2020년 최저임금 동결

■ 3월 임시국회 환노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 최저임금법, 실업급여 확대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

- 각 당은 주요 쟁점에 대한 입법방향 제시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사정 합의 정신 살려 탄력근로제 이달 말까지 입법 추진 (3. 12 원내대책회의)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3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 최저임금제 개선 필요 (3. 12, 교섭단체 대표연설)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의 동결제안,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기간 확대, 도입 요건 완화 시급(3. 13,교섭단체 대표연설)

※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사노위 논의를 참고하되,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

○ 이밖에 ILO협약과 관련한 노조법(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포함)과 특수형태종사자 보호 강화 제정법, 고용보험법 등도 상반기에 논의전망

[참고 5] 환노위 계류 주요 노동법안

법안명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인가연장근로 확대
최저임금법	▲ 업종별·지역별 구분적용, 결정체계·기준 변경
남녀고평법	▲ 출산휴가 기간/급여 확대 ▲ 자동육아휴직제
노조법	▲ 해고자,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삭제
고용보험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실업급여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관계법상 보호 법정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인정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동향

○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2. 27)

-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논의 초안에 포함됐던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하고 고용·경제상황을 반영

○ 경제계는 경총 주도하에 ①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포함, ②전문가위원과 공익위원의 중립성·객관성 강화, ③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참여 보장, ④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계 입장 및 세부내용 발표(2. 27)하고 국회 환노위에 건의서 제출(3. 13)

※ 공동입장 발표 단체 : 경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무역협회, 중견련

Ⅲ. 노사 및 판례동향

[표 6]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주요내용 비교 : 정부안 vs 경제계안

구분		정부안	경제계안
결정 기준		▲ (근로자 생활안정) 근로자의 생계비, 임금수준, 소득분배율,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 ▲ (고용 및 경제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상황 등	▲ 기업지불능력 반드시 포함 ※ 중장기적으로 '산식(formula)'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방식 도입 검토 필요
구간 설정 위원회	위원수	▲ 전문가 9명	▲ 전문가 6명 + 노·사·공익 각 1명 ※ 現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형태로 참여
	전문가 선정 방법	▲ 노사정이 각 5명씩(총 15명) 추천 → 노사 순차 배제 (각 3명씩 총 6명 배제)	▲ 정부가 12명 추천 → 노사 순차 배제 (각 3명씩 총 6명 배제)
결정 위원회	위원수	▲ 노·사·공익 각 7명(총 21명)	▲ 노·사·공익 각 7명(총 21명)
	위원 선정 방법	▲ 국회 4명, 정부 3명(상임위원 1명 포함) 추천	▲ 노·사·정이 각 5명씩(총 15명) 추천 → 노사 순차배제 (각 4명씩 총 8명 배제) ※ 정부 논의 초안의 2안과 동일
정부 책임성 강화		-	▲ 최저임금안에 대한 정부 검토의견 제시 의무화

- 고용부는 국회 입법을 통해 올해 심의부터 개편된 결정체계 하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계획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 27)
 - 노동계는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으며, 입법 과정에서 정의당 등 정치권과 연대를 통해 입법 저지 활동 추진 예고
- 한편,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 + 법정주휴시간'으로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2019.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 부담 심화
- 경제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 수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서 제출(3. 14)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향후 입법 과정에서 경제계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대책 활동을 전개할 계획

○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4월 또는 6월경 시작될 예정

-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국회에서 결정체계 개편 개정안이 3월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4월, 통과되면 6월부터 시작될 예정

■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관련 동향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20. 1. 16 시행)이 1. 5 공포됨에 따라 정부는 금년 말까지 산안법 하위법령의 정비를 완료할 계획

- ※ 산안법 전부개정법률 주요 내용 : ▲도급범위 확대 및 도급인 책임 강화,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 장관의 작업중지, ▲유해작업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물질안전보건 자료 고용부 제출 및 영업비밀 사전심사 등

○ 정부는 2월 말부터 하위법령 초안에 대해 노사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수렴 중이며, 경총은 주요 업종으로 구성된 「산안법 하위법령 대응 TF」를 1월부터 구성 운영하여 정부입법에 대응

- 하위법령 개정안 초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및 경영계 대응방안논의(2차 TF 회의까지 개최)

○ 산안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은 3월 말 또는 4월 초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계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

- ※ 쟁점사항 : 작업중지 범위 및 해제절차, 도급승인 대상, 발주자 의무 적용 공사범위 등

■ 양 노총 2019년 사업계획

○ 한국노총은 2019년 사업기조로 '참여·연대·투쟁의 조화'를 설정하고 3대 목표와 15대 과제 제시

- 한국노총은 3대 목표로 ▲200만 조직화, ▲노동정책 후퇴 저지, ▲노동존중사회로의 확고한 전환을 위한 환경 조성을 설정

Ⅲ. 노사 및 판례동향

[표 7] 한국노총 2019년 주요 사업계획

구분	주요 내용
사업기조	▲ 참여·연대·투쟁의 조화 - 참여 : 사회적 대화, 정부·여당과의 정책연대 - 연대 : 노동·시민사회, 남북 노동자 - 투쟁 : 상시투쟁체계 구축, 사회여론지형 변화에 기여하는 대중투쟁
3대 목표	① 200만 조직화 및 제1노총의 대표성 강화 - 전조직적 조직화 역량 강화, 취약계층 노동자 조직화 교두보 마련 ② 노동정책 후퇴 저지, 노조할 권리·사회안전망 강화 - 근로시간·최저임금 개악 저지, 타임오프 개선,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③ 노동존중사회로의 확고한 전환을 위한 환경 조성 - 노동시민사회 공조, 적폐청산과 정치개혁, 2020년 총선 전략 마련
15대 과제	① 실근로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② 노조법 전면개정, 타임오프 개선 ③ 사회적대화 확산, 근로자대표제도 확대 ④ 최저임금 제도개편 저지 및 인상 ⑤ 고용안정 및 고용보호 확대 등

- 한편, 한국노총은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해 타임오프 확대(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즉각 구성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의 통상임금 산입 등 주요 현안 해결 모색 방침

※ 한국노총은 3. 18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법 개정등 요구사항 전달

○ 민주노총은 2019년 주요 사업으로 200만 조직화,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2020년 총선 대응 등을 결정 예정

※ 민주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4. 4)에서 2019년 사업계획 확정 예정

- 민주노총은 2019년 총 4차례의 총파업·총력투쟁을 통해 연중 투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요구사항 관철을 시도한다는 방침

※ 3월, 4월 : 근로시간 유연화 반대, 6~7월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11~12월 : 개혁입법 촉구

Ⅲ. 노사 및 판례동향

[표 8] 민주노총 2019년 주요 사업계획

구분	주요 내용
200만 조직화	▲ 제1노총 지위 확보 ▲ '20년까지 전략조직기금 20억원 확보 ▲ 전략조직화 대상(IT, 특수형태종사자, 콜센터 등) 설정 및 조직화 추진
노동기본권 전면확대. 최저임금 1만원	▲ ILO 핵심협약 비준 ▲ 창구단일화제도·타임오프제도 폐지 ▲ 근로시간 유연화 반대 및 노동시간 상한 단축 투쟁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및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총력투쟁
정치 세력화	▲ (가칭)노동자 진보정치 운동 20년 평가 및 정치연대전략 제안기구 구성 ▲ 진보정당과 연대 강화 ▲ '20년 총선에서 민중단일후보 출마 계획

■ 노동계의 고율의 임금인상 요구에 따른 교섭 난항 우려

○ 양 노총은 금년도 임금인상 요구안 발표

- 한국노총은 월 274,050원, 민주노총은 월 205,000원 인상 요구

[표 9] 최근 3년간 양 노총 임금인상 요구 및 협약임금 인상률

연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협약임금 인상률
2017	月 257,860원 인상 ※ 정규직 7.6% ※ 비정규직 17.1%	月 239,000원 인상	3.6%
2018	月 318,479원 인상 ※ 정규직 9.2% ※ 비정규직 20.4%	月 224,000원 인상	4.2%
2019	月 274,050원 인상 ※ 정규직 7.5% ※ 비정규직 16.8%	月 205,000원 인상	-

○ 한편 금속노조는 올해 지부집단 교섭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월 123,526원 인상 제시 예정

- 금속노조는 4. 16 교섭을 시작해 7~8월 2차례 시기집중 투쟁 예정